

'스마트 교통'으로 차량정체 해소

전주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선정 국비 12억3000만원 30억7000만원 투입 내년까지 교통신호 무선시스템 도입·도로 소통상황 안내 전광판 등 체계 정비

전주시가 교통신호 무선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소통상황을 안내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2019년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2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30억 7000만원을 투입, 시내 주요도로의 차량정체 해소와 신뢰도 높은 교통정보 제공에 나설 계

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교통신호 무선시스템 도입 △좌회전 감응신호 운영 △돌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용 CCTV △도로 소통상황 안내용 전광판(VMS) △주차 가능한 주차장안내(공영주차장) 등 교통체계를 정비, 혁신도시와 예곡시터 등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도로의 정체해소에 나선다.

또한, 주요 도상에 설치된 공영주차

장의 주차 가능한 차량대수를 안내해 운전자들이 시내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교통정체를 해소로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시외곽 출·퇴근 도로 소통상황 안내 전광판을 설치, 교통정체 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안내하고 정체 도로에 차량 진입도 감소시킨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 장치도 함께 정비

해 신뢰도 높은 교통 소통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공공요금 절감과 차량정체 해소, 돌발상황 시 신속한 대응, 주차정보 제공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ITS 사업이 완공되면 전주를 찾는 외부 방문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체험단 발대식.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청과 전주역 앞 첫마중길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 시장과 관계증무원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

'가까운 의료기관서 독감 무료접종 받으세요'

전주시보건소, 2018-2019년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달 2일부터 연령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위탁의료기관서

전주시보건소는 2018~2019년도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오는 10월 2일부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먼저 만75세 이상 어르신(1943년 이전 출생자)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전주지역 27개 병·의원 포함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오는 10월 11일부터는 만65세~만74세 어르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예방접종 시행 초기의 혼잡 방지 등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한 조치다. 단, 만 65~74세 어르신 중에도 장애인이거나 당일진료환자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10월 2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무료로 실시하며 보건소에서는 오는 11월 16일부터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 접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만50세 이상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6일부터 전주시보건소와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중안·금상·도덕보건지소 등 전주시보건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생명에 위협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사람 △인플루엔자 백신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은 접종을 피하고,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중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송준상 시 보건소장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경인 만큼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의료기관에서 10월에서 12월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립별 무료접종 일정을 준수하고 접종 직후에는 휴식이나 발열 등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20~30분정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상태변화를 체크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 및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51~3) 또는 전주시콜센터(063-222-1000)를 이용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휴플러스 전주점, 아동센터 70만원 상당 김치냉장고 후원

휴플러스 전주점은 27일 유아1동 지역아동센터에 7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후원했다.

휴플러스 전주점은 꾸준한 봉사활동 전개뿐만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휴플러스 전주점 은재상 지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휴플러스 전주점은 유아지역 아동센터를 시작으로 다음달 관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찾아가 물품을 후원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조사

지선 유권자 예비 공보물에 '중앙인맥 활용 국비사업' 기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정 시장 "비용 기재 안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

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정 시장은 경찰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 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곧바로 수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대형폐기물 처리과정 '3S' 시스템 적용

완산구, 오늘 소프트웨어 사용자 간담회서 수정·보완

완산구는 대형 폐기물 수거에 작년 인터넷 신고방식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처리과정에 3S(Simple, Speedy, Smart)를 적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완산구에 따르면, 대형 폐기물의 접수 및 처리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빠르게 똑똑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수 시 수수료를 실시간 결제함은 물론 처리일정도 자체 출력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형폐기물 민원처리시스템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치기반) 및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가 도입되어 기존에 배출부터 수거까지 평균 일주일정도 소요됐으나 인터넷 접수 시 2~3일 이내로 단축 처리되고 있다.

구는 이번 3S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및 시스템을 추가 개선을 위해 28일 구청 직원, 수거업체 대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형폐기물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간담회를 갖고 수정·보완을 지속 할 예정이다.

완산구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이 365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해진 만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전주시 덕진구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복지 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취약계층 235가구다.

덕진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통해 복지취약계층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이번 사업으로 235가구에 소화기(3.3kg), 소화기방충대,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설치대상은 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구에서 소화기, 소화기방충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일괄 구입하여 가구별 현장설치를 위해 덕진소방서에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이관 받은 소방서는 10월 중 가구별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설치결과를 덕진구로 보고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경찰 구속영장 신청 10건 중 3건 미발부"

이재정 의원, 2014년 이후 미발부율 28.7%

2014년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미발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경찰이 신청한 14만 8820건의 구속영장 중 4만2759건은 2014년 이후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28.7%에 달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4년에 30.2%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15년 27.7%, 2016년 27.2%로 점점 줄어들다가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9.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발부된 영장 4만2759건 중 2만1022건은 검사가 불청구했고 2만1737건은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미발부 사유 중 검사 불청구는 증가하는 반면 판사 기각은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영장청구를 위한 경찰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재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북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계도 후 12월부터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추징금 10만원)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2개월(9.28~11.30) 동안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착형 홍보와 함께 계도 후 12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해외 연구사례에 의하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 미착용시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승차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지난 26일 정오께 군산 옥도면 관리도 북쪽 0.7km 해상에서 2명이 타고 있던 1t 미만의 보트 연료가 떨어지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레저보트 해상안전사고 '주의'

군산해경, 엔진고장 등 안전사고 발생 따라 당부

최근 들어 레저보트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지속적인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레저보트 엔진고장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행히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거나 예인초치 됐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상레저사고는 지난 2014년 이전에는 연간 3~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5년 36건, 2016년 33건, 2017년 54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34건에 이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다변화하는 국민 여가활동과 맞물려 개인레저기구 보급률이 늘고 바나나시를

취미로 삼는 인구 증가가 주원인으로 활동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연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여객이 많은 양식장 등지에서 레저 활동은 자제하며 간편한 안전장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어긴다면 아무리 완벽한 구조시스템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바다에 레저보트를 띄우기 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반드시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9건으로 어선 1건, 레저보트 7건, 해양오염 1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산=김정훈 기자